오늘의 날씨 (실보 7경)
부산 15~22 | 창원 16~23 마산 | 울산 16~27
진주 15~27 | 통영 16~22 | 서울 17~25

국제신문

제16018호 TEL(051)500-5114 www.kookje.co.kr THE KOOKJE DAILY NEWS 2005년 6월 1일(음력 4월25일) 수요일 24판

"부산 과학 꿈나무들에 희망 심어주자"

저명 과학자들 나섰다

前 총장 등 21명 '작은 과학자와의 만남'
21개 동사무소 찾아 초등학생 대상 강연

부산지역 이공계 교수들이 과학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윤수인(물리학) 전 부산대 총장 등 부산지역 이공계 저명교수 21명은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해 6월 첫째주부터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운영하는 21개 동사무소의 생활과학교실을 직접 찾아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작은 과학자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과학자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강연하는 경우는 있으나 동사무소 단위까지 직접 찾아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작은 과학자와의 만남'에 참가하는 과학자들은 윤 전 총장을 비롯해 김종훈 동아대 공대학장, 박맹언 부경대 환경생태학장, 부산과학기술상을 수상한 임선희(동아대) 정영기(동의대) 김광호 전호환 정세영(이상 부산대) 교수, 그리고 장희경(고신의대) 한진(인제의대) 김유택(한국해양대) 교수 등 부산지역 대학의 저명과학자들이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회원이기도 한 이들이 '지역 인재는 우리 손으로 키우자'며 의기 투합한 이유는 부산의 열악한 과학문화 인프라 때문이다. 지난 3월7일 '과학문화도시-부산' 선포식, 4월 부산과학축제 등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아직 과학꿈나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오는 10일 부산 금정구 서4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연할 윤수인 전 총장은 "부산은 아이들의 꿈을 키울 과학관이나 시민전문대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거나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지역 과학자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과학자가 된 동기도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영향이었다며 어린시절 단 한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은 과학자와의 만남'에서 마련되는 강연은 '인간유전자의 이해' '이순신과 세계 조선 1위 우리나라' '내가 본 남극이야기' '부산에 웬 화산' 등 다양하다.

인간의 19번째 염색체 비밀을 풀어 국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물론 제3회 부산과학기술상을 수상한 동아대 임선희 교수는 오는 3일 부산 사하구 하단2동사무소에서 열릴 '만남'에서 과학도의 자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과학자가 되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인재기자 jae02@kookje.co.kr

환경도 주민도 살린 '고래사랑'

그린피스, 울산 장생포서 반포경운동 반목
'음식문화 이해' 표명, 주민들 '손님대접'화답

"한국의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환경 강의를 해주세요."

포경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이에 맞서 반포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돈독한 우정을 나눠 화제가 되고 있다.

31일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주민들과 그린피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환경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회원들의 빨래를 손수 해주는 등 최고의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다. 반목을 거듭하던 이들이 친구가 되기까지는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린피스 회원들이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인 장생포항에서 포경반대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4일.

이들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가 해양공원 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고래위생처리장 신축부지에 고래대사관(텐트)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포경반대 캠페인에 들어갔다.

또 10여곳의 고래고기 전문점을 다니면서 고래고기 유통과 먹는 것에 대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린피스를 '동네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막가파 집단'으로 생각하는 등 회원들에 대해 거센 반감을 가졌다. 지난 25일에는 이들이 묵고 있는 텐트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린피스가 고래고기를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에 깊은 이해를 표시했고 이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그동안에 품은 적개심을 풀었다.

회원들의 천막을 찾아 '미역도 따다 주고 빨래를 해주는 등' 최고의 외국손님으로 대접, 화해 무드가 급속히 퍼지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린피스가 장생포 경제를 생각하고, 혼획된 고래를 팔고 먹는 것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여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1, 2일 장생포초등학교 와 옥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고래사랑 환경교육에 나선다.

울산=정두은기자 teiung@kookje.co.kr

모습 갖춘 APEC 정상회의장 부산 해운대 동백섬 APEC 2차 정상회의장 지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전체 공정이 50%를 넘어섰다. 이 지붕은 동백섬의 곡선을 형상화했다. 2차 정상회의장 공사는 당초 오는 9월 중순 준공 일정을 8월 말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덕철기자 kangdc@kookje.co.kr

LPG값 인하

7월부터 ℓ당 44원

오는 7월1일부터 LPG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ℓ당 54원 인하되고, 대신에 LPG판매부과금은 10원이 올라 소비자 가격은 평균 44원 떨어진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을 t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ℓ당 10원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특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ℓ당 54원 떨어져 소비자 가격은 ℓ당 44원이 하락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부담금 인상으로 올해 중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태기자 jtlee@kookje.co.kr

"노대통령이 서남해안사업 지시"

정찬용 전수석 "거절했으나 거듭 당부"
정상 시스템 무시 혼란야기 단초 제공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착각'해 지원하는 계기가 됐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관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업무 영역이나 정상적 국정시스템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 혼란을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정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지난 2003년 중반 인사관련 보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인 만큼 정 수석이 이 일을 맡아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수석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했으나, 며칠 뒤에 노 대통령이 다시 불러 서남해안 개발을 위한 역할을 거듭 당부, 결국 이 일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노 대통령과 정 수석이) 몇 차례 보고를 받고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큰 구상을 그쪽 지역출신인 인사수석에게 여론을 잘 수렴해 구상해보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정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구상은 행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남해안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 서울대 문동주 교수와 접촉했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상의해 문 교수에게 관련 프로젝트를 맡겼다.

한편 감사원은 31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강영일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을 상대로 조사한데 이어 1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 전 수석을 상대로 △켐빈 유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부터 서한을 받게 된 경위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관단한 근거 △김재복 사장과의 관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차재원기자 jwhn@kookje.co.kr
제해치기자 jhc@kookje.co.kr

한국 여 핸드볼 또 우승
덴마크에 올림픽 銀 한 풀어 30

열차 홈티켓 '짜증' 6
불법사채·악덕추심 철퇴 12

구·군 세수확보 '비상'

재산세 등 일부 종부세로 빠져 3~10% 감소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절감, 공유재산 매각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부산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올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종전 구·군세이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지면서 세수가 줄어들었지만 각 지자체들은 세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올 예산을 확정한 때문이다.

대부분의 구는 올 전체 예산규모 중 적게는 3~4%, 많게는 10% 가까이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전체 예산이 1490여억원인 해운대구는 종합부동산세로 빠져나가는 세수가 78억~79억원에 달해 예산 보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해운대구는 올 초부터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파악, 해운대구 좌동 동사무소 부지와 우동 어린이공원, 구 반송보건지소 부지 등을 매각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5~10% 절감하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134억원을 거둬들인 남구는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했다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30억~4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자 경상경비 절감에 나섰고, 예산규모가 1480여억원인 부산진구는 80억~9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되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금정구는 매각할 공유재산이 마땅치 않아 7월 부산시의 추경에서 각 지자체로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기다리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뒤 대부분을 일선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나눠준다는 방침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12월이어서 올해 안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희국기자 kukie@kookje.co.kr